
방위사업청 창원 원가사무소 존치 건의

2020. 1. 9

- 건의처 : 방위사업청
국방부
지역 국회의원



창원상공회의소

방위사업청 창원 원가사무소 존치 건의

I. 현황

-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 획득사업의 투명성, 효율성, 전문성의 획기적인 강화를 위해 국방부 등 8개 기관에 분산 운영되던 조직 및 기능을 통합하여 2006년 1월에 출범한 중앙행정기관임
- 방위사업청은 국방부에서 군수품의 수요가 결정되면, 전문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의 사후관리까지 담당하는 군수품 조달을 주요 업무 중의 하나로 수행하고 있음
- 방위사업청 개청 이전부터 운영하고 있는 방위사업청의 원가사무소는 주요 방산업체가 경상 및 충청권 등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창원·구미·대전지역에 운영중임
 - * 현장원가사무소 인력 : 창원(14명), 구미(6명), 대전(3명)
- 창원 원가사무소는 개소 이후 창원지역 방산업체의 원가산정과 일반군수물자의 원가산정 업무를 수행하여 지역소재 방산기업과 신속한 업무협력에 많은 기여를 해 왔음
- 또한, 창원 원가사무소는 2009년 11월 고객지원센터업무, 2016년 7월 국방규격 열람장소 지정, 2018년 4월 중소 방산업체 원가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지역의 방산기업 업무 편의 및 지역기업의 입찰참여 촉진에 많은 도움이 되었음
- 그러나, 방위사업청은 최근 조직혁신의 일환으로 지역의 원가사무소 3곳의 인력을 2월 이전에 본청으로 복귀시켜, 향후 본청에서 모든 업무를 담당하도록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

- 현재 창원에는 국가지정방산업체 18개사를 비롯하여 200여개의 방위산업 관련 기업체가 방산제품을 생산하거나 관련 부품을 공급함으로써 우리나라 국방경쟁력 강화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

II. 문제점

- 현재 방산업체는 원가산정을 위한 원가서류의 전산 제출 전후에 세 부내용을 확인·검토하기 위해 수시로 직접 대면하여 설명해야 할 사안이 발생함은 물론, 방사청 직원이 생산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검정해야 하는 사안도 수시로 발생하고 있음
- 그러나 지역 소재 원가사무소 인력이 과천 본청으로 복귀한다면, 업무협의를 위해 빈번하게 출장을 가야함으로써 시간적 손실은 물론, 이에따라 원가검토 기간이 지연되어 빠른 의사결정이 현재보다 어려울 것으로 우려됨
- 또한, 담당 공무원의 인사 이동 이후 방산업체에 대한 조속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필요한데, 원가사무소가 이전된다면 담당 공무원의 기업 현장 이해에 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임
- 이처럼 지역 방산기업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창원 원가사무소의 폐쇄결정은 지역 기업에 대한 국방조달업무 지원 측면은 물론 현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도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판단됨

III. 건의

- 현재 창원은 주력산업의 성장둔화에 따라 지역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,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방위산업을 미래먹거리 산업 중의 하나로 성장시키지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

- 이에 방산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과 지역 균형발전 등을 감안하여 지역 방산기업들이 원가산정 업무를 현재와 같이 지역에서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창원 원가사무소를 계속 존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

2020. 01. 09

창원상공회의소 회장 한 철 수

